

# 01

## FTA 활용 수출확대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정책과 성과



천흥욱 관세청장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거듭한 무역강국이다. 세계 무역이 FTA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약 10년에 걸쳐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FTA 체결국과의 수출은 2,856억불로 전체 수출 4,051억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sup>①</sup>이 발효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지연과 중국, 아세안 등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2년 연속 수출이 하락하고 있다. 2014년 5,727억불에서 2015년 5,269억불로 8% 감소했으며, 2016년 10월 기준으로 4,05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다시 8% 하락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현재 협상 진행중

이를 위해 관세청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YES FTA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는 발효 2년차를 맞은 한-중 FT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별히 의미 있는 정책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FTA 활용실익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중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7,086개 기업을 선정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활용상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컨설팅 하였다. 출산률 저하, 유아용품 해외 직구 증가 등으로 내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아생활용품 생산업체가 한-중 FTA를 활용한 결과 수출이 약 350억원 증가하고 협력업체의 국내 매출까지도 동반 상승한 것은 좋은 예이다.

둘째,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에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정보와 특혜관세 적용 결과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통관단계 심사를 간소화하였다. 향후 또 하나의 특혜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sup>2)</sup>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내 주요 물류 거점지역인 천진과 대련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였다. 중국 북경과 상해에는 관세관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및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는데, FTA차이나 협력관은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 중국 해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와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 1일 파견된 FTA차이나



<sup>2)</sup>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특혜무역협정

협력관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해관의 품목분류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고관세 부과건 등 현재까지 98억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넷째,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중국내 식품한류(韓流)의 확산과 함께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이었던 농산물이 수출품목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원산지간편인정제도」는 이러한 기회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농산물이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등 약 5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딱 1장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 11월부터는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하였다.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통하여 FTA를 쉽게 활용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남해군 흑마늘, 고흥 유자 등 지역특산품들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지난 해 12월 발효 당시 922건에 불과하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올해 1월 들어 5,205건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매월 10,000건 이상씩 발급되어 10월 기준으로 총 100,941건이 발급되었다.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수도 발효 당시 208개 업체에서 10월 기준 3,682개 기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한-중 FTA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향후 FTA 특혜관세폭 확대와 함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최근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 및 TPP<sup>③</sup> 발효 지연 등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실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반면에 중국은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FTAAP<sup>④</sup> 구축을 주장하며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계

③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우리나라는 관심표명

④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응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는 협정

시장에서 무역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을 FTA 활용기업으로 발전시켜 RCEP, FTAA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확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FTA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세계 각국의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017년 중소기업 지원 중점 추진정책으로 「YES FTA BEST 3·6·9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6·9 지원 전략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영세 기업 등 3대 기업군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확대, 취약산업 지원강화 및 FTA 자율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등 6대 과제를 바탕으로 9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기업화를 위한 중점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조달한 원재료, 중간재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통을 촉진하고, 내수 기업은 FTA를 활용하여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체약국의 원산지검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활용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新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FTA 세관협력 MOU 2020 Plan」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해외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FTA 이행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가 20개를 선정하여 세관당국간 이행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통관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해 나갈 것이다.

FTA 활용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FTA가 일반화되고 있는 무역환경에서 FTA는 분명히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청은 무역의 제일선에서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